

# “사교육·건설·통신 등 민생분야에 법집행·정책역량 집중”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1주년 간담회

철근누락 아파트 13개 등 LH 발주 입찰담합 연내 조사완료·심의절차 학원 거짓·과장광고 이달 조사완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사교육과 건설, 통신, 은행 등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에 역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교육업계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하고, 철근 누락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조사도 속도를 내어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당한 제 몫을 보장해주는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단단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민생 분야에서의 법집행과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코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한다. 건설 분야와 사교육, 통신·금융 분야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 중으로,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학원과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능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담

처리 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하고 있고, 이달내 조사를 마무리한다.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통신 3사, 은행 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은행 및

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금융투자업자 약관도 점검해 연내 시정요청기로 했다.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시책도 마련한다. 한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필수품목 거래관행”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니라 강제성 있는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4일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기 정착하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연동지원본부도 신속 지정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적발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현 3배)를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추정기준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한다.

전자상거래와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독과점 플

랫폼 등의 반칙행위에 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갑을분야(플랫폼-입점업체), 독과점 분야(블랫폼 간 경쟁) 구분해 정책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갑을 관계에서의 거래관행 개선은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 마련된 배달앱·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현재 순조롭게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은 물론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도 법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중견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만큼 지주회사 CVC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의 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현재 20%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1면 '표 통화 가치 약세'서 계속

## 0~14세 인구비중 11.5%... 日에 뒤져 'OECD 최하위'

日, 2021년 11.8%→작년 11.6%로 OECD평균은 17.3% 6명 당 1명 꼴

우리나라의 유소년인구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비교한 52개국(회원·비회원) 중 한국보다 비중이 낮은 곳은 없었다. 일본은 역대 처음으로 한국보다 유소년 비중을 앞질렀다.

14일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0~14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5%로 나타났다. 2021년(11.9%)보다 0.4%포인트(p) 줄었다.

일본도 같은 기간 11.8%에서 11.6%로 내려갔지만 감소 폭은 한국이 더 컸다. 이로써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그간 '만년 최하위' 일본 자리를 이어받았다.

지난해 OECD평균은 17.3%였다. 회원국은 인구 6명당 1명 이상이 유소년인데 반해 한국은 10명에 1명꼴인 것이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의 15



지난 1984년 국내 한 초등학교(국민)학교 교실. /국가기록원

세 미만 비율은 20%(2002년 기준 20.4%)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당시 14.2%였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2년 우리나라(15.1%)와 일본(13.0%)의 격차는 좁혀졌고 2017년에는 각각 13.1%, 12.3%로 1%p 이내로 근접했다. 그리고 작년에 위치가 뒤바뀌었다.

OECD는 유소년인구 비교에서 전

세계 평균치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25.3%로, 지구촌 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15세 미만의 영·유아·어린이라는 통계다.

또 52개국을 비교했다. 남아공이 28.1%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이스라엘(27.8%), 인도(25.3%), 멕시코(25.1%), 사우디아라비아(24.5%), 아르헨티나(24.0%), 브라질(20.5%) 순

이었다. 15%를 넘는 국가는 미국(17.8%)을 비롯해 러시아(17.7%), 프랑스(17.4%), 중국(17.2%), 영국(17.1%), 노르웨이(16.8%), 캐나다(15.6%), 네덜란드(15.4%) 등이다. 주요 20개국(G20) 평균이 20.3%, 유럽연합(EU)이 15.0%로 집계됐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이탈리아(12.6%)가 비중이 낮았다. 포르투갈(13.0%) 그리스(13.4%), 독일(14.0%), 크로아티아·싱가포르·불가리아(14.3%)도 상대적으로 유소년인구가 적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의 0~14세 인구는 57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2%에 불과했다. 이는 OECD의 공식집계(11.5%)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1월(11.4%)과 비교해 비율이 불과 7개월 만에 0.2%p 내려앉았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8.1%에서 18.6%로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달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0.0원)보다 4.3원 내린 1325.7원에 마감했다. /뉴스시스

## “최근 엔화약세 현상 일본 경기엔 긍정적”

엔화 약세는 한국 경제 대비 일본 경제의 상대적 호조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다. 실제 한국 증시가 조정되어 가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 증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엔달러 환율은 초완화적 통화정책에 달러당 147.81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엔화 약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연구원은 “작년에 엔화 초약세 현상을 일본 경제의 위기로 바라본 시각이 있었던 반면에 최근 엔화 약세 현상에 대해서는 일본 경기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일본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는 상저하고 기대감마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서베이 기준으로 일본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가 1.9%로 한국 1.2%를 웃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안상미 기자 smahn1@

## 고물가·고금리 지속... 韓경제 성장세 회복 더더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물가 3.4%↑... 4분기 3%대 예상 中 경기회복 지연에 韓 수출 부진

한국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가계의 구매력은 약화되고, 민간의 투자여력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수출이 부진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가계의 소비가 주춤하고 있다.

◆ 고물가 고금리... 소비여력 낮춰 소비자물가는 8월에 전년 동기 대비 3.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5.2%에서 3월 4.2%, 6월 2.7%까지 떨어지다 다시 올랐다.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영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향후 물가흐름

은 국제원자재가격과 기상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4분기에는 물가상승률이 3% 안팎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수준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해 0.5%에서 3.5%까지 끌어올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5개월만에 25조원 증가했다.

### ◆ 중국 경기 부진... 韓 수출 영향

수출은 점진적인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부진해 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며 “민간소비의 회복이 더디고, 수출부진도 지속돼 경기 하방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